

## 러시아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 동향

김영욱 | 법무법인 경연 러시아변호사, 국제거래법박사

### I 들어가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의 소통을 확대하고 텍스트, 사진을 통한 소통을 넘어서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콘텐츠의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채널 사용자들은 손쉽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 미디어'의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sup>1)</sup> 하지만 SNS를 통한 소통 방식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의 유포와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인격이 훼손되고 기업, 심지어 국가이미지 하락 등 사회적 혼란과 사회 구성원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짜 뉴스의 심각성이 인지되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내 발의된 가짜 뉴스 관련 법안은 주로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개정안이며 2018년에는 박광은의원 주도로 '가짜 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2927)'이 발의된바 있다.<sup>2)</sup> 동 법안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부가 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서 ①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②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③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거나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가짜 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짜 정보의 확산에 기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 news)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편, 2019, p. 82

2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8년 4월 5일 방광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2927)

러시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가 러시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4년 9월 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헌법을 개정, 러시아를 입헌군주제 국가로 선언하고 본인을 차르로 선언, 왕권을 자녀들에게 계승 한다” 는 내용이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된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연방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푸틴이 아니며 그의 쌍둥이 형제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15년간의 푸틴대통령의 외모 변천사를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도 상당히 많이 유포되어 있다.<sup>3)</sup> 러시아 정부는 가짜 뉴스의 확산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8일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안”(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을 제정,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문에서는 러시아 가짜 뉴스 관련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 II 러시아 가짜뉴스관련 규제 법안

### 1. 러시아의 가짜 뉴스 관련법의 제정 배경

2018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연방에서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3월에는 시베리아 케메로보 주 쇼핑몰에 화재가 발생하여, 60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12월에는 우랄산맥 인근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 아파트 폭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30여 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다. 당시 인터넷상에서는 사망자 수를 크게 과장하거나 테러설을 주장하는 허위정보가 확산되었고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혼란스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019년 3월 7일(현지시간) 언론 탄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가짜 뉴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3차 독회(심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sup>4)</sup>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 사회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고의로 확산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법안을 입안한 하원의원이 법안은 일반적인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거나 또는 생명, 건강, 안전,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거나 대중교통수단, 병원, 은행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위협이 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sup>5)</sup> 러시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특히 야권지도자들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날 채택된 법률안의 내용이 모호해 남용 위험이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 당국이 반정부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sup>6)</sup>

3 [http://emperoruniverse.blogspot.com/2017/01/blog-post\\_19.html](http://emperoruniverse.blogspot.com/2017/01/blog-post_19.html)

4 <https://ria.ru/20190307/1551613167.html>

5 <https://journal.tinkoff.ru/news/fake-news/>

6 연합뉴스, “러 하원 ‘가짜뉴스 금지’, 국가 모욕 콘텐츠 차단 법안 승인”, 2019/3/7 유철종 모스크바 특파원 기사

## 2. 가짜 뉴스 관련법의 주요 내용

상기 언급된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2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하나는 가짜뉴스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상징물이나 공공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다.

우선 동법 제15조제1항은 기존에 있었던 문구에 ‘국가상징 헌법, 공공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즉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도덕관념을 비속한 방식으로 모욕하거나, 사회, 국가, 국가상징, 헌법·공공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는 제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제1항2부터9까지는 가짜 뉴스의 지정과 불법적 게시물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온라인 매체에서 허위정보가 발견된 때 검찰총장 및 그의 대리인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을 감독하는 ‘로스콤 나드조르(Роскомнадзор)’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감독청(Роскомнадзор)은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sup>7)</sup> 감독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매체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터넷사업자가 감독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초의 법안에서는 고의적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루블, 법인에게는 최대 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 유포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거나 중대한 재산 손실, 사회질서 및 안정이 훼손된 경우에는 개인은 최대 40만 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의 우려와 달리 벌금 관련 내용은 동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 3. 가짜 뉴스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러시아 하원에 제출된 가짜 뉴스 관련 법안은 최초에는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sup>8)</sup>을 참조하여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은 총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 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그의 의무, 그리고 위반 시 벌금 규정이 동 법의 핵심 내용이다. 제1조에서는 이법의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해 제한되는 위법적 내용의 게시물은 독일 형법전에 규정된 특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로 예를 들면 민주적 법치국가 혹은 헌정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에서부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 또는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법적 게시물이 포함 된다. 제2조는 이법의 실행과정에서의 사업자들의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이의 제기된 불법적 게시물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

7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7172500080?input=1195m>

8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발생하는 혐오발언, 허위정보 등의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독일은 2017년 10월 1일 소셜 네트워크법을 제정한다.

공자는 불법적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고, 직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의 신청을 즉시 인지하고 이의 제기된 게시물이 불법인지, 삭제 또는 차단되어야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 중 불법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하며, 불법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와 제3조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안과 거의 유사하다. 제4조는 과태료 관련 규정이다. 이 법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5조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독일 국내에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행정청은 연방 법무부로 한다고 되어 있다.<sup>9)</sup>

그러나 2019년 3월7일 러시아 두마(하원)에 3차 독회를 통해 제출된 최종 법안은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법과는 달리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지 아니하고 러시아연방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법률 제15조제1.1항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위반 시 벌금 관련 규정도 동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러시아연방 감독청(Роскомнадзор)의 권한을 확대하였다는 측면이외에 완결된 법률은 아니다. 또한 동 법률에서 위법적 내용의 게시물 즉 가짜뉴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러시아연방 검찰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행정기관의 재량만 확대 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III 마치며

인터넷 특히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 확대 재생산 되는 형법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적 게시물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들을 보면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할 만한 심각한 내용들도 다수 유통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규제법안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한다. 또한 가짜 뉴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팩트에 기반 한 뉴스인지를 개인들이 일일이 판단해야 하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로감이 쌓이기도 한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아젠다(의제)를 생성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통제하는 강력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려되는 문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즉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게시한 글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검토되고, 삭제, 차단 조치되면 소위 위축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

9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 news)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편, 2019, p. 87

러시아연방의 경우도 2014년 이후부터 꾸준히 가짜 뉴스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자 결국 2019년 3월 관련 법안을 입안하였으나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법과 유사한 형태의 완결된 법률을 제정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러시아 내에서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18년 3월,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대통령이 압승, 4선 재선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공격 대상자인 푸틴 행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가짜 뉴스 금지 법안을 제정하여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던 것에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다만 향후 가짜 뉴스 처벌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또는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법과 유사한 별도의 법을 제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 참고문헌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 news)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편, 2019.

유익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언론과 법 제17권 제2호.

한갑운, 윤종민, 가짜 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법 8(1).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8년 4월 5일 방광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292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연합뉴스, “러 하원 ‘가짜뉴스 금지’, 국가 모욕 콘텐츠 차단 법안 승인”, 2019/3/7 일자 기사.